

독일 GERMANY



독일, 내년부터 아동수당 증액 예정

곽 사회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최근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Germany, BMFSFJ) 리사 파우스(Lisa Paus) 장관은 내년부터 자녀양육수당 금액과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본 계획은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당(Kinderge­ld) 증액, 자녀 양육 세제혜택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중된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기획한 제 3차 물가상승 대응 지원 조치 중 하나이다.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독일 내 모든 아동이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지급된다. 단, 자녀가 아직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 지역 고용청 내 아동수당 관련 부서의 심사를 통해 최대 25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아동수당은 2021년에 월 15유로 인상된 바 있고, 올해는 별다른 인상 없이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었다. 아동수당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월 219유로(한화 약 31만 원), 셋째 자녀인 경우 월 225유로(한화 약 31만 8천 원), 넷째부터는 월 250유로(한화 약 35만 4천 원)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첫째-셋째 자녀 월 237유로(한화 약 33만 5천 원)로, 기존에 비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수령하는 금액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반면 넷째 이상의 자녀는 월 250유로(한화 약 35만 4천 원)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2023년 120억 유로(한화 약 160조 9,800억 원), 2024년 180억 유로(한화 약 25조 4,8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기독민주당(CDU) 및 독일기독교사회당(CSU) 연합 측 가족정책 담당 실비아 브레헤(Silvia Breher) 대변인은 이번 제도 발표 후 다자녀가정에게는 거의 없사피 한 혜택이나 마찬가지로 비판했다. 또한 울리케 샤르프(Ulrike Scharf) 바바리아(Bavaria) 주 가족정책 장관 역시 이번 정책은 연방정부가 다자녀가정을 간과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비판하는 측은 아동수당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서는 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존에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났는데, 내년부터 추진되는 계획에서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월 수령액이 동일하게 통일되었고, 넷째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다자녀가정이 수령하는 아동수당 금액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앞서 언급한 아동수당 금액만 수령하는가? 독일이 보편적 아동수당 이외에는 어떤 자녀 양육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아동보너스수당(Kinderzuschlag)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별적 급여 제도다. 즉,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인 경우 세전 월 900유로(한화 약 127만 원), 한부모가정 월 600유로(한화 약 85만 원)라는 최저소득 기준 이하일 때 지원 자격에 부합한다. 해당 가정은 연방취업청(Federal Employment Agency) 가족수당 관할부서에 지원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아동보너스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개 아동보너스수당은 자녀가 만 25세가 될 때(미혼인 경우)까지 지급된다.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아동보너스수당 금액은 부모 소득, 자녀 연령 등 개별 기준에 따라 상이한 편이나, 자녀 1인당 최대 209유로(한화 약 29만 6천 원)로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상한선을 250유로(한화 약 35만 4천 원)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2년 5월, 독일 연방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최저생활 보장제도의 급여권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및 긴급 아동추가수당을 위한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앞서 언급한 저소득층 대상 아동보너스수당을 자녀 1인당 20유로(한화 약 2만 8천 원) 증액했다.

또 다른 예는 독일 연방정부가 2022년 7월 일회성으로 실시한 아동보너스수당(Kinderbonus)이다. 연방정부는 급격한 공과금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일시적으로나마 경감시키고자 각 자녀당 100유로(한화 약 14만 3천 원)를 일회성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매우 포괄적이었는데, 2022년 최소 한 달 이상 일반 아동수당 수령 대상이라면 누구나 이번 아동보너스수당을 수령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가 아동보너스수당이 지급된 2022년 7월 이후에 태어났더라도 100유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자녀를 둔 부모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관할당국에서 자동 처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괄 진행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구 내 자녀 양육 관련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실시해왔다. 한국과 독일의 세부 경제상황 및 환경은 상이하므로, 무조건적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역시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독일에서 최근 다각도로 추진하는 자녀 양육 관련 지원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참고해 볼 만 할 사례일 것이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보건사회복지부의 여성건강전략 발표 (1)

임 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영국의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수십 년 간 해결되지 않은 성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8월에 “영국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했다. 영국정부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지만,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여성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유병률과 장애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의료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건강에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산이나 환경과 같이,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건강결과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며, 중요한 임상시험에 있어서도 여성은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직접적인 건강의 불평등 이외에도 보건의료체계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평등까지 해소하고자 영국은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했다. 본문에서는 해당 전략의 배경, 중점사안, 그리고 협력계획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영국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도입 배경과 절차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영국정부는 보건의료에서 ‘남성이 기본값(male as default)’이 된 실태에 대해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와 임상시험, 보건의료전문가 교육 및 실습, 그리고 보건의료정책과 서비스 설계는 전부 남성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여성은 배제되어왔다. 여성들이 보건의료정책과 연구에서 배제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여성건강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해당 전략은 피임과 월경 그리고 조산과 환경까지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건강행동과 결과를 포함한다. 따라서, 생애주기적 접근법이 해당 전략에서 핵심이다.

- 영국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여성들의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여성건강전략을 세우기 위해 2021년 3월 8일 전국을 대상으로 ‘의견 공모(call for evidence)’를 2주간 진행하였다. 공모는 세 가지 분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16세 이상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건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Women’s Health - Let’s talk about it)’ 공공설문조사이다. 두 번째는 여성건강에 전문성을 가진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연구보고서나 논문과 같은 서면으로 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세 번째는 요크 대학(University of York)이 왕립재단(King’s Fund)과 협력하여 영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Study)이다. 이 중 특히 서면 제출 분야에서는 2주간 10만 명 이상의 개인 응답과 400개 이상의 전문가 및 기관의 자료가 접수되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여성건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의 6가지 중점사안

-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은 10년간의 변혁을 계획한 바, 장기적으로 여성건강증진과 불평등해소를 도모할 수 있는 중점사안을 6가지 정했다.

1. 여성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금기와 낙인을 해결하고, 여성들의 요구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귀를 기울이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의 보건과 복지체계에서 여성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2. 서비스 접근성 향상: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생산건강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궁내막증과 같은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또한, 치매나 자폐와 같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해 여성을 기본 값으로 두고, 건강요인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명백히 할 것
3. 개인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인식할 것: 여성의 나이, 인종, 성적지향, 장애, 출신지가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치료에 대한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4. 더 나은 정보와 교육: 여성들이 여성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5. 여성의 건강상태가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할 것: 월경이나 환경과 같이 금기시 되는 주제에 대한 대화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이 직장에서 생산적일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주고, 관리자들이 좋은 사례를 강조 할 수 있도록 할 것
6. 연구자원을 확장하여 근거에 기반한 좋은 질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을 장려할 것: 여성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연구대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하고, 데이터 격차를 줄이고, 현존하는 데이터가 성별로 분리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은 몇 가지 주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 월경과 부인과 건강, 임신과 유산, 환경, 정신건강, 암, 여성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노화, 만성질환이 그 예시다.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협력계획

- 본 전략은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바,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영국보건교육원(Health Education England), 그리고 왕립의대와 같은 외부기관과 산업 그리고 자원봉사 분야와도 협력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본 전략은 지역단체들 그리고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들과 꾸준히 소통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Bundesagentur für Arbeit (n.d), “Child allowance (Kinderzuschlag)”, <https://www.arbeitsagentur.de/en/child-allowance> (접속일: 2022.10.23).
- Bundesregierung (2022.6.30.), “Der Kinderbonus kommt im Juli”,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deutsche-einheit/kinderbonus-faq-2053990> (접속일: 2022.10.23).
- Deutscher Bundestag (n.d), “Bundestag stimmt für Kinderzuschlag und Einmalzahlung”,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19-de-sofortzuschlagsgesetz-891898#:~:text=Der%20Bundestag%20hat%20sich%20am,\(20%2F1411\)%20befasst](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19-de-sofortzuschlagsgesetz-891898#:~:text=Der%20Bundestag%20hat%20sich%20am,(20%2F1411)%20befasst) (접속일: 2022.10.23).
- Deutsche Handwerks Zeitung (2022.9.8), “Kindergeld ab 2023: Wer bekommt wann, wie viel?”, <https://www.deutsche-handwerks-zeitung.de/kindergeld-wer-bekommt-wann-wie-viel-143143/> (접속일: 2022.10.23).
- The Federal Government (2022.9.14.), “Inflation compensation for 48 million peopl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inflation-compensation-act-2126292> (접속일: 2022.10.23).
- The Local (2022.9.7.), “Germany to raise child benefits for families with up to three children”, <https://www.thelocal.de/20220907/germany-to-raise-child-benefits-for-families-with-up-to-three-children/> (접속일: 2022.10.23).

참고자료

- The Guardian (2022.07.20) “New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aims to end decades of inequality”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2/jul/20/womens-health-strategy-england-published-government-inequality> (접속일: 2022.10.20).
- GOV.UK (2022.08.30.) “Policy Paper: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mens-health-strategy-for-england/womens-health-strategy-for-england#ministerial-foreword> (접속일: 2022.10.20).
- Kate Womersley, Carina Hockham & Edward Mullins (2022.08.19.) “The Women’s Health Strategy: ambitions need action and accountability” <https://doi.org/10.1136/bmj.o2059> (접속일: 2022.10.24).